

미국은 지금

반 토막 난 교육부와 산업 여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Issue Brief

교육부에 칼을 빼든 트럼프

2025년 3월 11일 **미국 행정부는 1,300명 이상의 교육부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트럼프 2기 집권 후 교육부 인원이 4,133명에서 2,183명으로 약 47%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는 첫 임기에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집권에 성공하며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 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그 시작이 3/11일 대규모 해고이다.

결국은 비용 감축이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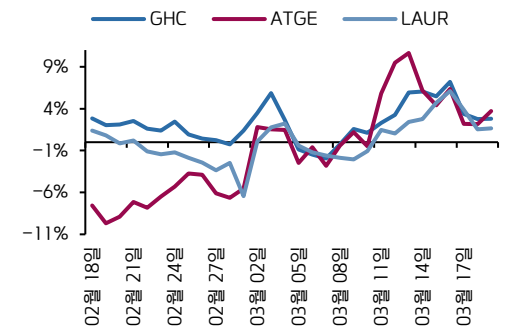
대외적 명분은 “교육의 자율권 보장”이며 각 주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하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실질적 목적은 연방정부 비용 절감에 있다.** 교육부 예산은 FY2024 기준 2,680억 달러로, 총 연방지출의 4%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대부분 재량지출로 이루어져 있어서 예산 감축 타겟이 되기 용이하다. 물론 교육부 예산 중 연방 학자금 대출, 펠 그랜트(Pell Grants) 등은 의무지출로 이루어져 있고, 트럼프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은 완전히 보존될 것이라 밝혔다. 다만 교육부 행정 및 운영 등의 재량지출은 적극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을까?

교육부 예산의 약 60%인 1,607억 달러는 연방 학자금 지원국(FSA)에서 사용된다. 다행히 연방 학자금 대출은 의무 지출이기에 예산 감축 대상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FSA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FSA의 주 업무는 할당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매년 보조금, 대출, 근로장학금 배분 등을 감독하는 일을 한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FSA 전체 직원 약 1,400명 중에서 약 25%인 326명이 해고되었다. 전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 관리가 FSA에는 허수 인원이 거의 없다고 언급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해고로 인해 실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 실무는 학생들에게 “보조금” 및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일이다. 재정 지원신청서 처리 지연, 학생대출 연장 등이 예상된다. 물론 이는 단기적 여파이나, 장기적으로 가면 공교육의 질적 저하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2page 계속).

대규모 해고 후 Edu 기업 수익률 변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3/11 단행된 교육부 대규모 해고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교육부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취약 계층 교육 환경을 위해 개별 추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개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자율권 보장”을 취지로 각 주에게 교육을 위임한다면 위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예산 감축에 따라 연방 지원 자금이 줄어들면 공립학교 시스템은 주 정부 예산과 지방세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에 재정이 풍족한 주와 그렇지 못한 주 사이의 교육 격차는 심해질 수 있다. **즉 1)공교육의 전체적 질이 떨어질 수 있고, 2)지역별, 계층별 교육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

오히려 수혜를 보는 곳은?

공립학교 예산이 줄어들어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질 경우 차터스쿨, 사립학교, 홈스쿨링 등 사적 교육기관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장학금, 바우처 등 공적 자금이 사립 기관에 사용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또한 **과거 연방 정부 차원의 엄격한 규제를 받던 영리 대학들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연방정부 지원금을 결정하던 취업성능기준(Gainful Employment Rule)과 같은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감시에서 벗어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연방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연방 학자금 지원은 의무 지출로 다른 기관에서 집행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 이에 수익원은 어느정도 유지되지만 감독 규제 기관의 기능 약화에 따른 자율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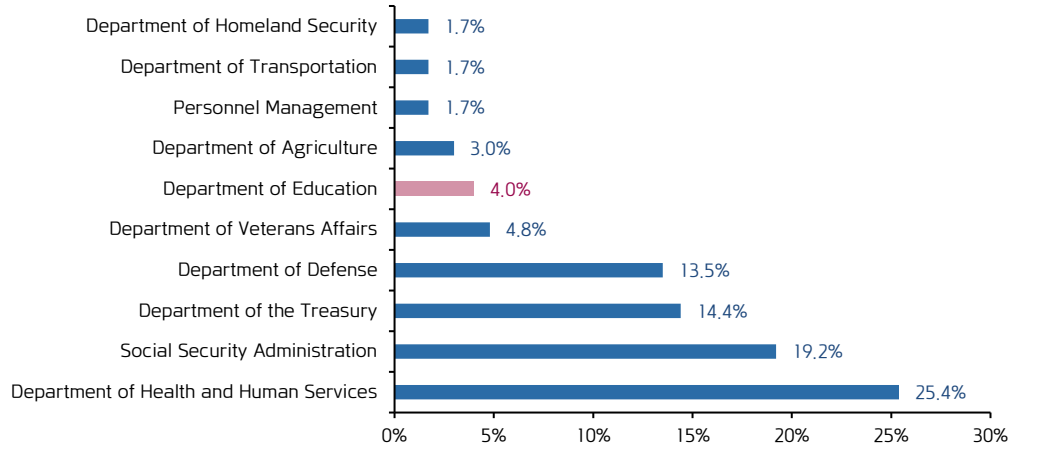
한편,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에드테크(EdTech)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학습 수용도가 이미 높아진 상황에서 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하던 공립 교육이 약화될 경우 온라인 학습 기반 사립 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가 주장하는 “교육부 폐지”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63%이며, 민주당 의원들은 빈곤 학생의 피해 및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결정적인 부분은 교육부 폐지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60 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현재 공화당 상원 의석은 53 석에 불과하다.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다만 폐지는 어려워도 기능 약화는 유도할 수 있다. 교육부 인원 대거 감축이 그 시작이며, 주 정부로의 교육 권한 이전이 기능 약화 과정이고, 종국엔 비용 감축을 유도할 것이다.

산업 흐름 살펴보기

교육부 직원 해고(3/11) 이후 교육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양극화를 보였다. 공교육 관련 기업이나, 사기업 관련 기업이나 기준으로 반대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은 교육부 대량 해고 이후 긍정적 주가 상승을 보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징이다. **1)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사적 교육 기관, 2)간호사, 기술, 전문직 등 직업 관련 교육 기관, 3)온라인 중심 교육 제공** 등이다. 원인을 검토해 보면 K-12(5~18세 학생) 관련 예산 지급은 불투명하지만, 의무 지출인 대학생 대상 직접 대출 프로그램은 유지되는 것이 첫째 원인이다. 이에 더해 직업 기술 교육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강화는 양당의 지지를 받는 영역이며, 사적 교육 기관은 온라인 중심 EdTech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나머지 이유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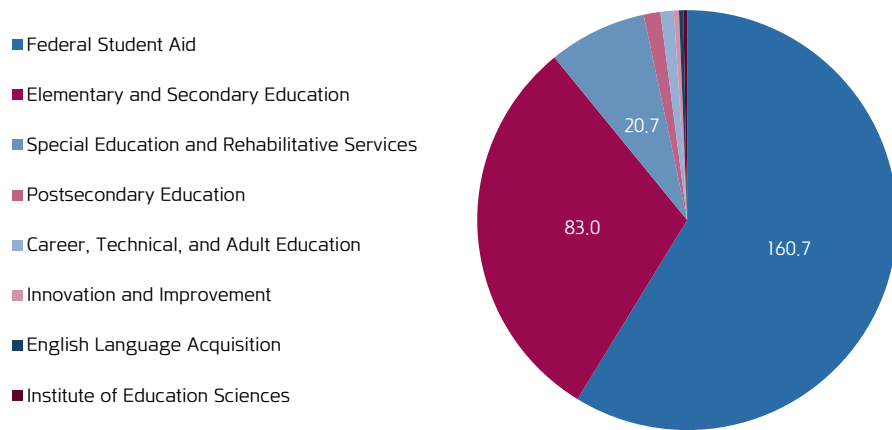
관련 공통점을 충족하는 종목은 **Graham Holdings(GHC), Adtalem Global Education(ATGE), Laureate Education(LAUR)** 등이 있으며, 교육부 대규모 해고(3/11) 이후 3/20 일 까지 세 종목은 각각 5.6%, 5.4%, 1.6%의 상승률을 보였다. 교육부 축소 관련 흐름이 강해질 경우 위 기업들의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교육부 권한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여론과 민주당의 반대는 아직 트럼프가 넘어야 큰 산으로 남아있다.

FY 2024 연방 지출 속 교육부 예산 비중



자료: Education Department, 키움증권 리서치

FY 2024 교육부 지출 항목 분류



자료: Education Department, 키움증권 리서치

FY 2024 교육부 지출 항목 분류 Education & Training Services

Ticker	Company	Sector	Market Cap	P/E	특징
GHC	Graham Holdings	Consumer Defensive	4.19B	5.85	교육 및 미디어 사업 운영, Kaplan 을 통한 시험 준비 및 직업 훈련 제공
ATGE	Adtalem Global Education	Consumer Defensive	3.71B	18.54	의료, 간호, 비즈니스 등 전문 직업 교육 제공
LAUR	Laureate Education	Consumer Defensive	2.96B	10.11	글로벌 고등 교육 네트워크 운영, 실용적인 학위 프로그램 제공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